

제321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12월23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현안보고
  - 가. 고용노동부

심사된 안건

- 1. 현안보고 ..... 1
  - 가. 고용노동부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철도노조 지도부의 검거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민노총 본부 사무실을 마치 군사작전하듯 약 5000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서 쑥대밭을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철도파업 때문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문명 민주사회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무 위원회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노동부장관님과 공무원들에게도 중요한 행사가 있었지만 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철도파업과 어제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력 투입 관련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하게 소집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위원님들이 일치단결해서 이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

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겠습니다.

1. 현안보고  
가. 고용노동부

(10시20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력 투입 및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철도노조 파업 관련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중에서 2페이지부터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주요 쟁점 및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약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09시부터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또 12월 10일 날 이어서 철도공사 이사회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철도산업 면허신청을 12일 날 했고, 13일 날 이어서 출자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11일 날 철도노조하고 민주노총은 이사회 결정 철회 등 5대 요구 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의 답변을 촉구한 이후에 13일 날 철도공사 노사

는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진전 없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12월 16일 그 이후에서 21일까지 법원은 노조 집행부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12월 18일 철도공사는 최종 업무복귀를 12월 19일 9시까지 할 것을 지시를 발령했었고, 철도노조 파업 주동자 145명에 대한 징계를 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19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 집행부 상대로 77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21일 국토부장관은 수서발 KTX 회사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12월 22일입니다. 어제 10시부터 철도노조위원장 등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병력을 투입했으나 미검거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23일 확대간부파업, 12월 2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정을 언론에 알린 바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 쟁점 및 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쟁점입니다.

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면서 수서발 KTX 철도산업 면허 중단, 민간매각방지법안 마련 등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고 민간매각 방지장치 등을 강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그 자세한 방지 장치들은 밑에 자세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대책 부분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노조에 대해서는 파업 중단을 설득하고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현황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님, 장관님!

○심상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잠깐만요, 발언 순서 확인하시면서.....

현안보고에서 주무 부처인 노동부가 무엇을 했는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하셨나

요? 파업 이전이나 파업 이후나, 어제 공권력 투입되어도 노동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혀 몰랐는지, 노동부가 한 일을 보고하세요.

노동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협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중재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들 질의 토론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상정을 하고 여기에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그동안에 실무차원에서 다 적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핫라인들을 열어 놓고 노사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기까지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이라도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장 신계륜 파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철도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제가 들었고, 저도 중재에 나서려고 몇 번 노력을 했고, 실제 실무회담도 했지만 노동부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주무 부처가 노동부인데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리고 어제의 사태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은 알고 계셨나요, 경찰력 투입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었습니다. 마는 저도 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사전에는 전혀 몰랐고 사후에 알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에게, 이것은 영장 집행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그랬습니다. 아마 그 집행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부처에 미리 상의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상의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 참 섭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무 부처 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 파업 때문에 5000명이 나 되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포위해서 쑥대밭을 만드는데 노동부장관이 그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

도 못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전에는 저희들이 언론에서 그때 말씀도 드렸습시다라는 관계부처들이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다는 집행 과정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경우에도 아마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아니,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건이 지금 체포영장 가지고 사람 체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민노총 전체를 군사작전 하듯 그러한 행위를 한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이 사전에 모르면 그것은 노동부장관으로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실제로 영장을 발부받은 대상들이 거기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경찰들이 알고, 그렇게 거기에 경찰병력이 배치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언제 실제로 그런 액션을 취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하고 미리 상의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님도 아마 들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노동부가 직접 파악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대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들어가 앉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예전대로 먼저 질의를 7분으로 제한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질의는 심상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질의 순서는 왜 안 오지?

○**위원장 신계륜** 순서 빨리 갖다 드리세요.

○**이완영 위원** 뭐하는 거예요, 빨리 안 주고?

○**김성태 위원** 정상적으로, 지난번 김상민 위원이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심상정 위원이 맞습니다.

○**심상정 위원** 뭐가 문제 있어요?

○**이완영 위원** 아니, 안 나눠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계륜** 아니, 위원님들이 질의 순서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패턴으로 심상정 위원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환노위 위원 된 이후에 첫 번째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축하합니다.

○**심상정 위원** 예.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질의 순서가 돼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께서 철도민영화 반대 여야 공동결의를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식을 하신 것 같아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라는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꿈수 민영화로 일관하고 또 공권력으로 철도노조의 대화를 대체함으로써 국민들이 크게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이 지금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예요. 그래서 일명 철도민영화 금지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에게 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법으로 만드는 직선도로 놔두고 자꾸만 불신을 키우는 우회도로를 제안하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라도 저는 집권여당이 좀 앞장서서 국회가 할 도리를 다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국회에서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데 새누리당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관께 묻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을 아셨습니까, 사전에? 언제 아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사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알지는 못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것 언제 아셨어요? 아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어제 이미 언론을 통해서 중계가 돼 있었고……

○**심상정 위원** 16일 날 공안대책협의회 고용노동부 안 갔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때 실무자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실무자들 실무협의를 한 것을 장관이 보고를 안 받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관련해서 각 부처의 정보를 공유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상정 위원** 민주노총이 18년 만에 아주 쑥대밭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금 임금체계 개편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 고용문제 등을 비롯해서 앞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숙제가 엄청나게 많습니

다. 고용노동부도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노사정의 ‘노’는 어디입니까, 장관님? 어디하고 대화를 하실 예정이세요, 앞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노동계……

○**심상정 위원** 노동계 어디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민주노총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다 포함이 돼……

○**심상정 위원** 18년 만에 민주노총을 가서 쑥대밭을 만들고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도 사실은……

○**심상정 위원** 정부에게, 대통령에게 또는 관계 기관 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창립 이후에 수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민주노총 사무실을 그렇게 공권력으로 짓밟은 적은 없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정부는 반노동적인 정부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소신 발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전에 저희들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기 위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심상정 위원** 아니, 고용노동부장관께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안행부장관이 하실 걱정을 하실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헌법상의 노동3권을 어떻게 잘 집행할 것인가 이것을 걱정하시는 게 장관이 하셔야 될 일이고 이번 사태에 있어서도 앞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아무리 이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부라 하더라도 어디까지 금기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것을 잘 조정해 내는 것이 장관의 역할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 사안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노사가……

○**심상정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역할을 정부 내에서 건의를 해 보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태가 이렇게……

○**심상정 위원** 저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잘 되려면 정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렇게 소신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이런 사태를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이런 장관부터 저는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여기 국회의원들 앞에 오셔 가지고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몰랐다’ 그 얘기 하시려고 여기 오늘 오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어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했다, 미리 보고받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상정 위원** 저는 이 사태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법화된 민주노총을 이렇게 그냥 체포영장 하나 달랑 가지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난입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14년 동안 현행법에서 노조로 인정됐던 전교조 범외노조 만들어, 노조 아님 통보해 버리고 여러 가지 증빙서류 다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안 받아주고 이것은 박근혜정부의 아주 뿌리 깊은 노사 배제적인 그런 전략에 기인한 것이다, 아버지 때부터 몸에 익숙한 그런 반노동정서, 노동 배제주의 이것의 발현 아닙니까, 장관?

○**이완영 위원** 말조심하세요, 심 위원님!

○**심상정 위원** 제가 발언할 기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완영 위원** 말조심하시라고! 왜 아버지가 나와!

○**은수미 위원** 질의시간에 그러지 마세요!

○**이완영 위원** 왜 아버지가 나오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어제 전개된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이, 장관께서 적어도 헌법상의 노동3권을 존중하고 또 앞으로 노사관계를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신을 가지고 이 정부에서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답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노사도 이 사안들을 처음부터 대화로 풀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했었고 뒤에, 백그라운드에 누누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여기까지 진전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어제 민주노총 사무실 경찰력 투입과 관련해서도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위원**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아무리 법을 집행하고 노조를 탄압하더라도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금도가. 지금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를 비롯해서 18년 만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박근혜정부의……

노조 말살 정책, 이 박근혜정부의 노조 말살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마이크를 앞쪽으로 갖다 놓고 똑바로 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예.

어제 사태는 저는 노동부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또 노동전문가로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하면서, 지금 앞서 발언하신 심 위원님 또 야당 위원님들은 마치 박근혜정부에서만 이렇게 탄압한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파업은 88년 이후 여섯 차례 파업이 있었는데 모두 불법파업이었습니다. 이번 파업이 14

일로 가장 장기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DJ 정부 때 이틀간 파업을 해서 이때도 민영화정책 반대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03년, 06년 두 차례 했습니다. 이 역시도 철도구조개혁법을 반대로 불법파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똑같습니다. 공권력 투입하고 불법파업 처리하고 징계하고 파면하고 손배소 제기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 정권에서만 있는 것처럼 비쳐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언론도 오늘 많이 계시는데 정말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파업은 정상적인 파업,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보호받고 우리 노동3권이 보호되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불법파업을 노동3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처리했는데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만 노동탄압 정권으로 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도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노사관계라는 것은 전력을 보고 경험을 보 건대 이렇게 정부 한쪽만 가지고 몰아붙이는 것은 지금 철도파업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게 과연 공기업으로서 국민들한테 또 산업현장에 이렇게 피해가 막중하다면 우리 환노위에서는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중재에 나설 수 있다면 나서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재를 해 보려고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정부에서 제대로 중재를 못 한다면 이 공기업의 중대한 파업에 대해서는 저는 환노위가 나서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정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중재에 나선다고……

**○이완영 위원** 아니, 장관님께 여쭙 봅시다.

저는 노사관계를 오래 해 본 경험으로 볼 때 파업 들어가기 전에는요 당연히 불법파업을 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합니다.

왜 이 노조 간부가 법을 위반해서 인신의 구속을 받으면서 노동운동을 해야 되느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도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면 노사가 모두 가질 게 없

다, 그래서 대화로 해결하도록……

○이완영 위원 파업 들어가기 전에 설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도 왜 철도노조 간부는 그렇게 파업에 들어갔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철도노조에서는 그것을 민영화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완조치까지를 다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업을 접지 못하고 안 하고 있어서, 지금도 안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미 들어간 이상 지금이라도, 저는 2003년도에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철도 파업에 직접 내가 담당 라인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때는요 정말 빠른 신속한 공권력 투입으로 불법파업이 빨리 정리가 됐고 그만큼 우리 국민의 불편이나 산업의 피해가 적었습니다.

지금 14일 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불법파업이 이루어진다는 자체도 정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여러 부처 중에 노동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저는 합법파업이든 불법파업이든 노조 간부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 가지고 빨리 파업을 접기 위한 노력, 장관님이 설득하고 대화에 응하도록 하고, 왜? 합법이든 불법이든 우리가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빨리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노동부가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파업 들어가고 나서 장관님이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노조 간부들과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설득도 하고, 또 저희들이 바라기는 어쨌건 철도노조에서도 처음에 내세운 극단적인 어떤 부정의 논리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회사 설립이 가져오게 될……

○이완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파업 돌입 후에 노동부 간부들이나 실무자가 만난 적이 있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는 노조 간부가 지금 노동부 안 만나 줄 거라고 봐요. 제 과거의 경험도 그랬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아직 만난 적이 없지요? 확실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만났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자세한 내용은……

○이완영 위원 그러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파업을 지속하겠다는 게 지금 노조의 주장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래서 노조가 실제로 실질적인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공간을 열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은 도피 중일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아무리 노동부가 중재 역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부가 아무리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전혀 먹히지가 않을 거예요. 연락도 안 될 겁니다.

체포도 빨리 해야 되지만 노동부는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해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와서 진술하고 자수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대화가 되도록 해야 이 파업이 빨리 종식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역할을……

지금 경찰, 정부에서도 도망가서 못 잡은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노조 간부를 접촉해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공권력 진압이 안 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꼭 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올 줄은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영장이 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노조 집행부도 법에 따라서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또 법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것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했었으면 더 나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태가 이렇게 까지 왔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시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워낙 노사가 근로자들의 향후 근로조건에 관련된 실질적인 것보다는 정부에서 그렇게 누차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완영 위원 질의 중에 하나 장관께 물은 게, 앞으로 만날 계획이라기보다는 파업 전이든 파업 후든 장관께서 철도노동조합 대표들을 면담하신 적이 있냐고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실무자들이 했고, 지금까지는 사실 국토부, 정부하고 공사가 민영화, 그다음에 철도 자회사 설립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사관계 부처로서 거기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조 집행부를 만나서 이렇게 설득하고 그런 기회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했어도 그렇게 듣지를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저한테 면담 신청을 하면서 ‘노동부장관을 면담 신청했는데 만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통 보면 철도 파업이 얼마나 큰 물류대란을 일으키고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당연히 장관이 한번쯤 이런저런 이유로 만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났는데, 실무자들이 접촉했다? 지금 장관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이따가 내가 실무자들이 어떤 접촉을 했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다 물어보겠습니다만, 저는 장관의 태도가 그리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지금 온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사실 파국을 맞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 특히 장관께서 오늘 업무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우선 ‘목적상 정당성 없는 파업 중단을 설득한다’ 이 한 줄 외에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파장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실무자들을 통해서 어떤 대화나 설득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장관께서 직접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박근혜정부가 청와대에서 지시와 명령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도 파업에 대해서도 어떤 공안적인 시각,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공권력을 동원한 강경 탄압 외에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노조가 세워진 이래 민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어제 공권력이 민주노총에 들어간 것은 불법적인 법 집행입니다. 체포영장만 발부되었는데, 압수·수색영장 기각된 것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홍영표 위원**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압수·수색영장이 없으면 시건장치를 망치로 부수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 5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시내를 마비시키면서 이렇게 작전하듯이 하는 것, 이것이 이 사태 해결에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됩니까?

적어도 저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번에 공안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셨지요, 담당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거기 가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오는 겁니까? 그런 회의에 가서 들러리나 서고……

고용노동부는 적어도 그런 경찰이나 검찰과는 달리 헌법의 노동3권을 존중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 주는 쪽에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 가서 검찰이 불러 주는 대로 받아 적어와 가지고 강경 진압하는 데 들러리나 서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노조는 지금 이렇게 자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철도공사의 적자를 더 악화시키고, 철도공사의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 노선인 KTX에 자회사를 이렇게 설립하게 되면 매년 1400억 정도의 적자가 더 발생해서 철도공사는 적자 구조를 해결할 수 없이 그냥 악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저는 우선 고용노동부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만 마련이 되면 오늘이라도 파업을 풀지요. 왜 철도노조가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면서 파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강경 탄압에 의해서 상황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장관님, 철도노조 파업이 지도부만 이렇게 검거해서 구속하면 바로 끝납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시 한번 노사가 앉아서 실질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법적·제도적 장치가 지금 제가 보고드린 몇 가지 사항들인데, 그것 외에 다른 더 효과적인 장치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 예, 그러니까 당장 정부도 강경 탄압 일변도의 대책만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저는 다시 노사, 노정 간에 이런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지도부만 구속을 시키면 파업이 바로 중단됩니까?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도부를 어떻게 해야 이 사태가 빨리 수습될 수 있다

고 됩니까? 만약에 지도부를 구속한다면 바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업이 중단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구속해서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지도부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대화의 자리에 앉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 지금 직접 답변 안 하시는데, 제 판단으로는 지도부만 구속해서 이 사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파업은 굉장히 장기화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생활의 불편, 산업에 대한 엄청난 피해,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강경 탄압 일변도의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판단을 하고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홍영표 위원** 그리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1998년도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있을 당시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여당에서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경찰력 투입을 막고 극적인 타결, 합의를 유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김성태 간사께서 아침에도 같이 논의를 했지만, 정말 우리 환노위가 나서서 노사, 노정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노력을 하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그러한 어떤, 이 문제를 공권력에 의존한 그런 강경 탄압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의 고유한 그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노사 간에 대화의 테이블이 마련되고 그것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여야가 합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어쨌건 물리적인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화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를 타진해 보고,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철도노조에서 장관 면담 신청했는데 제가 거부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신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실무선에서 확인해보니까 면담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청와대의 이 담당 비서관 면담도 신청을 했고 노동부장관도 면담을 신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국제철도연맹 사람들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입니다. 저만 만나 줬다고 합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에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철도 민영화 논란은 이번 박근혜정부에서부터 느닷없이 튀어나온 그런 얘기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불신의 벽이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대화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신뢰도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 사태를 몰고 온 원인 중의 하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국회 소관 상임위 입장에서도 정치력의 부재 역시 이번 철도 파업이 장기화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철도와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개혁, 경영 합리화는 당리당락을 따져가면서 정쟁을 할 사안이 아닌데도 노사 양측에 대한 균형 잡힌 중재보다는 일방적 편들기에 치우친 경향을 보인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우려가 큰 시점인 만큼 여야 정치권도 정략적 시각을 내려놓고 나서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께 좀 묻는 게, 그동안 노조와 지금이 정부가 절대적인 소통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신뢰의 실종이 심각한데 다소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무 부처 국토교통부장관까지 나서서 민영화하지

않겠다……

이번 철도노조의 가장 큰 이슈는 민영화였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김성태 위원** 민영화 저지 투쟁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민영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대통령, 국무총리, 주무 부처 국토교통부장관까지 나서서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함에도 파업을 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진정성과 신뢰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도 제대로 이 사람들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업 평화를 유지 또 갈등을 중재·조정해야 될 그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이 철도노조와 어떤 형태로든지 적극적인 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범정부적인 그런 노력의 중심에 고용노동부가 서야 되는 것인데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무 부처와 안행부와 청와대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적인 측면에서 철도노조를 대한다고 그랬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과 중재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 이야기도 좀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마저도 아무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비판받아도 싸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장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이 더 노력을 했어야 되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이게 노사 당사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개입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게 하세요.

때로는 대통령께 좀 꾸지람을 받더라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철도노조의 이 파업 중단을 위해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느 자리에든 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철도노조는 꾸준히 사회적 대

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만큼 국회가 나서서 앞으로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도 가져 보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13년째 이 소모적 논쟁과 또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무려 17조 6000억입니다. 하루 이자만 12억씩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예요. 뭔가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화 또 경쟁력 있는 그런 코레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사 간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적인 자기네들의 뼈를 깎는 노력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대리인 역할을 코레일 사장이 하고 또 정부를 상대로 싸움만 하는 그런 노조의 모습은 결코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장관께서는 앞으로 코레일 노사가…… 지금 이 민영화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지 않겠다는 이런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레일 노조가 이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이 노조에게 우리 정부가 한 말은 절대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부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소신은 어떤 건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철도노조가 정부의 진정성 그리고 민간매각 방지장치들을 확실하게 지켜 나가겠다는 그러한 신뢰성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산업법 개정을 통해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법 개정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느 국가를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철도노사의 이 파업 중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계속적인……

고용노동부장관직을 걸고 대통령이 한 이야기, 국무총리가 한 이야기, 주무 부처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이야기, 내가 장관직을 걸고 책임을 지

겠다는 그런 대국민 선언과 또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말 노사 당사자의 문제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방하남 장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철도노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철도산업법 개정을 통해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 구체화되어야만 철도 파업은 이제 멈춰질 수 있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직접 말씀을 책임 있게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법안 마련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미 발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안 마련까지 가기 전에 이미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방지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면 오히려 법안보다도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국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사안들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좀 도와주신다면 노동조합도 아마 그런 것들을 믿고 신뢰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경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이 철도 문제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좀 오래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출발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마 민영화 문제가 최초로 거론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는 민영화를 완전히 중단 선언을 했지요. 그 이후에 이제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포기됐고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정부에서도 쪽 해 왔던 사안인데 이번에 이게 다시 불거지게 된 계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내놓은……

**○김경협 위원** 문제는 기재부의 발언입니다, 기

재부의 발언. 철도 민영화 시사 발언을 하면서 이게 지금 도화선이 된 겁니다.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면서도, '민영화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면서 이게 실질적인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고 나니까 정부에서 다시 '민영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지요. 이 불신은 정부가 곧 자초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문제는 철도 파업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성급하게 이것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문제입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불법파업으로 규정을 하면서 조정과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정신청을 했고 조정절차를 거쳤지요?

장관님, 이번에 철도 파업 조정신청 했고 조정절차를 거쳤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조정기간이 종료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김경협 위원** 조정기간이 끝났잖아요, 파업 들어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김경협 위원** 그러면 조정신청, 조정절차 다 거쳤서, 여기는 조정신청, 조정절차 다 거쳤기 때문에 조정기간은 종료됐고 철도는 당연히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불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는 목적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닌데 이것을 성급하게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누가 더 이상의 조정이나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거지요. 사태를 점점 더 악화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사후조정제도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조정 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전에도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안은 사후조정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사후조정 사안이…… 장관님 얘기대로 민영화 문제는 사후조정 사안이 아니라고 합시다. 이번 문제에 분명히 임금근로조건 부분

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조정 사안이 아닌데 왜 조정신청은 받고 조정절차는 진행을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김경협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전부 절차적인 것들이인데요……

○**김경협 위원** 그 절차적인 게 이미 임금근로조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받아들였던 거고 조정절차를 진행을 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사후조정도 장관님 얘기대로 민영화 문제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임금근로조건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후조정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전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데 위원님 아까 좀 전에 위원님들, 과거에 2002년하고 2003년, 2006년, 거기에서도 전부 목적이 정당하지 못해서 불법파업으로 그렇게……

○**김경협 위원** 옛날 얘기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요, 지금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세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불법파업이나 아니냐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김경협 위원** 그 불법파업이나 아니냐의 문제도 마찬가지로는 겁니다.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다 거쳤고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조정절차가 다 이행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는 임금근로조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후조정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노동부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만약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고려를 안 하고 임금근로조건만 가지고 사후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지금 철도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영화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그것을……

○**김경협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미 민영화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취소가,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경협 위원** 실질적으로 핵심문제 몇 가지,

대화의 자리만 마련되면 충분히 이것은 논의되고 타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노사가 민영화가 아니고, 민영화 아니기 때문에……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불법과업으로 규정을 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대화를 지금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책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미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판례들을 들어서 지금 그 상태로, 그런 목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과업이라는 것을 누누이 알렸고 설득을 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과거의 판례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임금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구조 조정의 경우도 합법화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법성 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것을 성급하게 불법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급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체포영장, 체포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도피하고, 사태는 악화되고, 대화 당사자도 없애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노동부가 노동청도 아니고 노동부인 이유는, 국무위원인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방침을 결정할 때 노동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라고 이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노사관계 관련된 부분에서, 파업 관련된 부분에서 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조정하고 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고 이것을 주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처가 하면 다 끌려가는 대로 노동부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말씀하신 대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과국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것도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인 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겠습니까? 불법은 불법이고,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철도노조와 얘기한 것은 그런 파업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요건들에 관해서 대화로 풀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대화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부터 먼저 만드셔야 되고요. 노동부가 이 대화자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서야 합니다. 사후조정제도 이런 것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적인 장치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께서 환경노동위원회가 나서서, 상임위라도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환노위가 나서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청문회 방식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조정소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안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철도파업 노동부에 도저히 맡겨서 안 되는 것 우리 상임위라도 여기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서 하루속히 여기에 대한 조정과 중재에 들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김경협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주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朱永順 委員 예.

○위원장 신계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委員 주영순 위원입니다.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걱정을 지금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도 어려움이 많을 뿐더러 화물운송 및 여객운송에도 큰 차질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철도파업이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입니까?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

○**朱永順 委員** 그러면 철도지도부를 검거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부에서는 지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계륜 위원장,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朱永順 委員** 철도파업은 존경하는 조금 전에 이완영 위원이나 김성태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수차례 이것을 하려다가 못 했던 겁니다.

지금 공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경영 정상화라는 것은 국가의 명운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런데 과거에 철도노조에서 데모하면 그냥 물러서 버리고 물러서 버리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14, 15년 동안 쌓여져 가지고 결국 공기업 부채가 500조에 달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모든 산업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민영화를 강력히 지금, 철도민영화라고 지금 노조에서는 부르짖지만 민영화가 아닌 공기업 자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과거처럼 이 정부에서 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물러서 버리면 공기업의 지금까지 모든 정부 계획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던 계획 자체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때문에 철도지도부를 검거하면서까지도 이 문제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500조의 공기업 부채를 탕감해 갈 수 있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대화와 협상에 다소 소홀했다는 부분도 분명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부터 철도노조의 집행부를 검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와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관이 나서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또 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까지 전부 나와서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들습니까? 김정은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어젯밤에 북한 뉴스에 김정은이는 지금 철도노조 데모하는 것을 거기 전부 지금 지지하고 난리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의, 장관도 아닌 대통령의 말을 안 믿고 그것을 불신하면 이 나라 국민이 아니지요.

철도노조는 분명히 각성을 많이 하고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빨리 나서서 자수를 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철도노조 빚이 17조 6000억 원입니다. 그래도 매년, 지금 금년 인상을 8.1%를 인상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돼요? 또 매년 성과급을 1000~3000억까지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공기업을 그대로 또 데모한다고 해서 방치하고 물러서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관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지금 최소한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영 혁신을 추구하자는 요구에 민영화 운운하며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정년 연장 58세를 60세로 또 연장해 주라고 하는 노조의 주장은 철밥통, 기득권 지키기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정부에서 철도노조에 또다시 물러서면 전 공기업의 민영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대화는 노사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주선을 하고 또 대화가 잘돼서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중재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오각성해야 됩니다. 마치 어떤 문제가 하나 돌발하면 큰 어떤 호재를 만난 것마냥 밀어붙이고,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도 수차례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것을 정말로 정치인들이라면 여야가 머리고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어서 경영을 정상화하고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가를 찾아야지 마치 장관이 잘못하고 박근혜정부가 잘못된 것마냥, 때를 만난 것마냥 정부가 나서서 이런…… 정치권도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민주당 은수미입니다.

어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대체적으로 무리한 공권력 투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 정확하게는 불법 공권력 투입이고요. 차마 하기는 어렵지만 아예 단언을 하라하면 정부가 때강도로 돌변한 사건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아마 수천 장의 사진이 나왔을 겁니다마는, 이런 사진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때강도로 돌변한 것이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수색영장 발부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발부 받은 체포영장이 3개월짜리였어요. 3개월 내에 체포영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색영장도 없이, 저도 이 유리문을 해머로 깨부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유리문 2개를 부수고, 잠금장치 해제하고, 집기 파손하면서 건물 옥상까지 난입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색영장을 요구했어요.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경향신문 사옥 앞, 즉 민주노총이 들

어서 있는 경향신문 사옥 앞뿐만 아니라 서대문역까지 차단벽을 설치했는데요. 경향신문 사옥 앞의 공간은 12월 말까지 집회신고가 허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제지당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어오셨던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 다 제지당했습니다. 많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예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정부가 강도행위를 하려고 시민들 및 야당 의원들의 자유로운 권리, 심지어는 의정활동의 권리까지 방해한 겁니다. 거기다가 한 오후 8시쯤 살수차 진입시키더라고요, 물대포를 쏘겠다고. 의원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시민들 앞에서 수없이 위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경찰이 오직 의혹만 가지고 난입을 한 겁니다. ‘지도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알려 줬었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는다’ 혹은 ‘없다’, ‘지도부 없다’ 이렇게 알려 줬음에도 불구하고 5000여 명 투입해 가지고 그대로 난입을 했습니다. 13시간 정도 아예 때강도가 시내 한복판에서 활보를 한 사건입니다.

우선 고용부한테 좀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제 현장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누구 계십니까? 어제 현장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국·과장님들 중에 어제 현장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고용부장관은 계속 ‘대화, 대화’ 하시더라고요. 저희 야당 의원들이 왜 왔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정부의 불법행위는 어떻게 하더라도 대화 좀 해 보려고 가다가 정문은 가로막혔고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의원들이 사실은 비상통로로 올라갔었습니다, 대화를 하겠다고, 아무리 힘겨운 사안이라도.

그때 마침 기자님들이 같이 동행을 하셔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공간이 이렇게 어둡고 힘겨운 공간, 물이 잔뜩 있고요, 만약 연행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겠구나라는 위협감을 느낄 정도의 공간이었고 저희도 가로막혔습니다.

비상계단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가기가 힘들 정도였고 난간 아래로는 완전히 깎아지른 절벽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계단 전체에 물

이 뿌려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든 중재하고 대화하겠노라고 올라가다가 막혔습니다.

고용부? 제가 대화하겠다고 올라가는 고용부 사람들 코빼기도 못 봤습니다.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리고 수색영장은 법원이 거부했습니다마는 체포영장을 어쩔 수 없이 발부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12월 9일 날 파업 돌입 이후에 고용부가 한 짓이 뭐니까? 하루만인 10일 날 이것 불법이다, 11일 날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것 불법이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도 국토부·안행부 장관은 대국민 호소문, 이것이 호소문인지 위협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 발표했습니다.

고용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요?

아까 장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철도 지도부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자리에 앉아라’.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부가 부처 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자리에 앉히세요! 어제 현장에도 없었던, 대화 중재도 못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중재하려고 올라갔던 야당 의원들 10시간 추위에 떨떨 떨고 있었는데 그리고 시민들 물 맞고 있는 와중에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아까 고용부장관 주영순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하나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나 여쭙 보고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영순 위원께서 뭐라고 요구하셨느냐 하면요, ‘철도노조 요구를…… 여기서 물러나면 전 공기업 민영화 못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지난 12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대리 홍영표 1분만 더 하세요.

○은수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12월 13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이것을 보면 수서발 KTX 이후에 죽죽죽죽 자회사 만들어서 민영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료, 교육 심지어는 노동 규제완화까지 하겠노라고 아주 딱하니 민영화 대책을 발표하셨던군요.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철도노조 요구에서 물러나면 전 공기업 민영화

못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지속적인 민영화 대책 계속하시겠다, 이 4차 투자활성화 대책까지 계속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지 그 입장은 좀 밝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존경하는 주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영순 위원님의 말씀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참,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당시 경찰이 거기에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인 경찰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화와 타협으로 가기 위해서 역할들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노력이나 역할이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저는 여전히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 인식이 이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하려면 검찰이나 경찰 또 일부 청와대의 공안적 시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지금 한국노총에서도 긴급 산별대책회의를 열어 가지고 대정부 회의체 불참을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를 잘못 해결하면 박근혜정부에 있어서 노정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가고,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노사 간에 또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물 건너갑니다.

지금 한국노총까지도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장관님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25일 날 철도노조가 국제철도연맹하고 같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관리자 면담을 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들어봤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지금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12월 11일 날 받았다고 했는데 이 네 가지 사항이 실제로는 11월 달부터 나왔던 사항들인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다섯 가지 요구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봉홍 위원** 다섯 가지 요구사항 이것이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최봉홍 위원** 10월 달에 국제노동계에는 한국의 철도노조가 이것을 요구한다고 전부 소문이 났었고 12월 6일 날 대통령이 서한을 받은 속에 이 다섯 가지가 4개로 적혀 가지고 왔습니다.

(홍영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다면, 지금 PPT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철도과업은 9월 달 철도연맹의 브뤼셀 회의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10월 2일 날 ITF협회 철도분과부장이라는 맥 우라타, 이 사람이 반한 친구입니다. 반한 노조 간부인데 이 친구의 조정에 의해서 죽은 것이 사실인데 전혀 몰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때 인지를 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온 외스타인 아슬락센이라는 친구도 노르웨이 친구인데 자기가 의장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지금 말은 철도민영화가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국은 민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들고 나와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서 속고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날 신계륜 위원장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통역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민노총에서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철도 안의 내용을 국제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공공운수연맹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5000명의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추태를 부린 것은 정부의 잘못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법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 노동부가 안행부하고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노동부하고 사전협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민주노총이 아침에 왔을 때 없었다면 공공연하게 집행관을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죽 돌려 가지고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했으면 국가적인 손실도 엄청나게 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치 이슈로 삼아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6시에 쳐들어오고 난 후에 사람 없다 하고 경찰을 완전히 우사 바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법 집행 절차에서부터 서로 불신이 쌓여 있고, 그다음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그 다섯 가지 사항 속에 제일 중요한 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입니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10월 2일 날 일본 친구 맥우라타에 의해 가지고 ITF협회에서 대통령한테…… 그 내용에 야당 정치인, 노조원,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전부 포함해 가지고 철도민영화에 대한 대책기구를 구성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것을 정치적 이슈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다급한 것은 과업을 푸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계륜 위원장하고 만난 면담 자리에서 제가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앞장을 서 가지고 전체 책임을 지고 한다면 우리도 나서 주겠다, 그런데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참여해 가지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근본은 노사 자율입니다. 아마 어제 노동부가 안간 것도 자율이니까 안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것을 민영화 구조로 몰고 가 가지고 경제구조로 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있어서 크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도 노동조합을 할 때 5년 동안 민영화 바람에 가장 고충을 겪었고, 이 철도산업 자체가 김영삼 정부부터 죽 시작해서 민영화가 시도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똑바로 손을 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민영화를 반대한다, 법으로 만든다…… 잘되면 민영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노사가 같이 서로가 깊이 있게 연구해 가지고 찬성을 하



면 찬성하는 대로 유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국토교통부와 안행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구속 상태, 체포영장 이것을 전부 잠정합의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노동부가 중간에 서 가지고 거기 지도부와 그다음 코레일과 중간에 노동부가 중재하고 필요하다면 환노위도 같이 중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 안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 보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제일 먼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지금 노동부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협의를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머리를 맞대고, 단 그 대신에 주변 세력을 전부 제거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것은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최봉홍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최봉홍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장관께서는 저번 전체회의였나요, 노동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따라서 어제 한 건물에 6000여 명 이상의 경찰력이 투입되고 사실상, 아까 앞에서 얘기 많이 나왔지만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된 상태에서 단 수배자 6, 7명이 있다는 정보만을 가지고 민주노총 건물에 엄청난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 야당 의원님들이 계셨고.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조치가 가능한 것이 노동부의 불법파업 규정 때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시 노동부 공문에 따르면 위원장의 발언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파업 목적이 합법적이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노동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왜 불법파업인지.

간략히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파업이 불법이나 적법이라는 여러 가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파업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적상 적법성을 잃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본 겁니다.

또 꼭 고용노동부가 봐서가 아니고 정부에는 검찰도 있고 또 당사자 정부인 국토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당사자 정부인, 아까 국토부라고 하셨는데, 지금 노동부는 이 철도노조 파업의 사용자가 사실상 코레일이고 국토부고 크게 봐서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동부가 거기에서 얼마만큼 중립적인 역할을 해서 노동3권을 보호하는 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가 제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이한 경우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어떤 정부든 노동권은 보호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노동3권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상황에서서도 노사가 적법하게 행동을 하고, 파업을 하더라도 적법하게 하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할 때도 노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권고를 하고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어제 민주노총에 체포영장, 6, 7명의 수배자가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거의 1000배네요, 6000여 명의 경찰력이 그것도 민주노총 건물에 들어가서 특히 잠금장치 이런 것을 부순 것 이런 디테일, 각론은 안 하더라도 들어가서 우리 철도노조 간부들 수배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 조치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관점에서 좀 과도한 노조에 대한 탄압이 아니었나, 어떤 게……

그러니까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어제 사태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불법파업일 때는 그래도 된다고 보십니까? 과도한 점이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어제 사안들은 공권력 집행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지, 또 좀 적법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지는 아마 나중에

그것들이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장하나 위원 아니, 말씀이 좀 그러신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고용부장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태가 그렇게, 거의 끝까지 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장하나 위원 나중에 밝혀진다는 것은 좀 그러세요.

어제의 상황을..... 물론 현장에는 안 오셨지요, 장관님께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현장에는 안 갔습니다.

○장하나 위원 서울청에서 좀 나오셨다고 하는 것 같던데.....

현장에 안 나오시면 좀 곤란한 상황 같고요. 다음에는 이런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현장에는 좀 직접 와서 보시기를 바라고, 안타깝다고만 하셨는데, 중립적 입장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아무리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을 하셨다 한들 어제처럼 과도할 때는 중립적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70여억 원, 77억 원 손배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일단 철도노조의 현재 파업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목적상 불법파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배소 관련해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다툼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과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장하나 위원 저는 이번 코레일뿐만 아니라 많은, 특히나 큰 어떤 사측과 노조와의 문제가 있을 때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소가 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도구로 쓰여져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레일은 어떤 민간자본의 소유가 아니라 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의 경우에는 또 국민 정서에 반하는 기업 운영이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고요.

저는 말이 77억이지 수십억 원대의 이런 손배소가 몇 명의 이런 노조원들, 평범한 가장들에게 짐 지워졌을 때는 그게 가정 파탄을 낳고, 또 어느 경우에는 사회적 타살을 낳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그런 경우가 많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공기업까지 그런 민간기업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한다는 게 너무 사실상 좀 부끄럽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를 하자면.....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불법파업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어제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파업이니까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립적인 것을 자신한다면요, 지금 꼭 파업이 불법이다만 보지 마시고 코레일은 어떤지, 경찰투입은 어떤지 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업이 불법이라고 해서 어제와 같은 조치라든가 천문학적 손배소가 다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왜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법적 잣대를, 법과 기준을 늘 그렇게 철저히 하고, 특히 이것은 민간자본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사실 이들 노동자와..... 오늘 '노정 파국이 났다' 이런 기사 제목도 뽑혔던데, 민주노총도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까지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가 좀 납득될 만한 중립적 입장, 노동부마저 노동자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좀 안 버렸으면 하는 최소한의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저는 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계륜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정권 교체를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1년 안에 해야 되는 일이 개혁과 혁신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좋게 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이 두 가지의 과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살리기는 포기했다고 생각이 들고, 개혁과 혁신보다는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서 불법 선거개입을 덮으려는 노력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공노·전교조·민주노총 죽이기로 점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손톱 밑의 가시를 뽑아 버리는 작업, 이것이 1년 동안 한 성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떨립니다.

어제의 민주노총 진입 사건은 정말 문명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의 불법행위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체포영장만 가지고 체포하고자 하는 대상은 있지도 않은 건물에 시건장치를 부수고 폭력으로 들어간 사건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고용노동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지금 안행부와 국토부는 아마 이 진입 사건을 주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의 얘기를 들어 보면 노동부는 철저하게 소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무력한 상태입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짚고 싶습니다.

참 안타깝다든지 설명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단답식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상황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입 사건이, 민주노총 진입 사건이 경찰로부터 자행된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입니까? 사후입니까, 사전입니까? 시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사전에 공식적으로 진입 관련해서……

○**한명숙 위원** 알았습니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닙니다. 제가 알지 못했다고 말씀……

○**한명숙 위원** 사후? 아, 그러니까 사전에는 알지 못하고, 통보를 못 받은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진입 관련해서 통보는 받지 않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사후에는 알았지요? 사후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아신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사후에는 계속 모니터

링하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한명숙 위원**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장관님과 차관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는 서울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명숙 위원** 서울청에 계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한명숙 위원** 하루 종일?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하루 종일은 아닙니다.

○**한명숙 위원** 차관님도 마찬가지로입니까? 같이 계셨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닙니다, 저는 어제 세종시로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상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것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이 투입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한명숙 위원** 아마 18년 이래에 민주노총 사무실 본부를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폭력적으로 이런 사태같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저도 언론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사실상 장관님께서 ‘여러모로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표현을 오늘 여러 번 쓰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대화를 하신 겁니까? 실무자라는 것이 어느 급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여러 급입니다, 위원님.

○**한명숙 위원** 그러면 사무관급, 서기관급, 국장급……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다 포함해서, 국장급 다 포함해서……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랑 대화를 하신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철도노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심각한 철도노조 문제를 장관님께서 일일이 보고를 안 받으십니까, 실무선에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그런 것까지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몇 차례나 민주노총이랑 만났습니까, 국장급·사무관급·서기관급 다 망라해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이 지금 약간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서면으로 어떤 급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몇 번이나 접촉을 했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혹시 차관님은 민주노총이나 또는 철도노조와 함께 접촉을 해서 대화를 나누어본 적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철도파업 건으로요?

○**한명숙 위원** 예.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한명숙 위원** 장관님도 한 번도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직접 만나서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지만, 특별히 별로 노력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 고용노동부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 박근혜정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각 부처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장관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무위원들의 소신 발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눈치장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문제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지켜줘야, 보호해 주고 지켜 줘야 될 노동기본권의 수호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도 국정 운영을 해 봤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지금 차관회의가 철도노조와 관련해서 있었다고 들었는데,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조정회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 철도노조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사태가 나고 나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국무조정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도 이미 다 알려진 바가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한명숙 위원** 그러면 고용부장관이 참석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차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게 차관회의였지요? 장관이 참석한 것은 아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없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장관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차관이 갑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갑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장관이 참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참석합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는 차관회의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 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 이후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때 어떤 얘기가 됐는지도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때는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철도노

조에 대해서도 했겠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개인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박근혜정부의 국무회의나 또는 전체적인 이 내각의 문제점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건 민주노동이나 철도노조도 일단 대화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정부하의 어떤 신뢰 또 혹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여지를 보여주면 더 쉽게 대화와 타협의 장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명숙 위원 여유는 항상 힘 있는 자가 내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에 위원 민주당 한정에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시면서 다시 한번 원칙 고수를 재확인하고,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했다 이렇게 기사가 뜨는데요.

사회적 대화는 주로 어느 때 합니까, 사회적 대화?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회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할 경우에 보통 사회적 대화를 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한정에 위원 그것은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한정에 위원 그렇게 열린 자세로 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라고 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노사정 대타협인데요.

대통령께서 원하는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 대화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몇 건 있었지요, 그렇지요,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복수 일부 있었습니다.

○한정에 위원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판결이 나왔던 통상임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중노위가 조정중지를 내린 그 내용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정에 위원 중노위가 조정중지를 내리면서 조정 결과를 뭐라고 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돼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 결과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정에 위원 결과를 뭐라고 했던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조정중지 했습니다.

○한정에 위원 조정중지인데, 조정중지를 내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급하면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던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노사가 지금 중재를 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다투지 않고 민영화라는 그러한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정에 위원 누가 장관한테 이런 내용을 가르쳐 드리셨나요? 누가 장관께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 조율이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정안 제시가 오히려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정을 종료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건입니다.

○한정에 위원 즉 다시 말해서.....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앞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정에 위원 ‘조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그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지금 장관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노사 당사자 간에’ ‘노사 자율로’ 얘기하는데 노사 자율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노사 당사자

가 대화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또는 일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사회 원로들이 얘기를 했던 것이 사회적 대화로 이것을 풀어야 한다, 정말로 정부가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영화 아니다’,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영화 아니다’, 장관께서도 지금 ‘민영화 아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왜 그 민영화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못 받아들이느냐, 주식을 못 팔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상법상 주주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식의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상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주식을 언제든지 원하면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상법에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주가 주식을 못 팔게 하는 것을 그냥 말로서 천명을 하는 것이 일반법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대강 살리기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얘기했고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고 환경부 장관이 얘기했고 그런데 그 정권 끝나고 나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이었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한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였어요.

왜 이것을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것만 사회적 대화하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 통상임금 문제 해결하는 것, 시간제 일자리 만드는 것 이런 것만 사회적 대화를 하라고 하고 정작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필요한 안전에 대해서는 왜 사회적 대화를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노동부 장관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철도 경쟁력 향상하고 효율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국민들에게 한 국정 과제 약속이기 때문에……

○**한정애 위원** 국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것을 어떻게 하면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지 않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누차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한정애 위원**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 철도노조의 그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한 것은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하고 관련 부처에서 이 법안으로 오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들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노동조합을 설득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으나 공청회를 했으나 그 공청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동조합에서도 그것이 철도민영화에 이르는 길의 전초전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봐서는 세상에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자회사를 만든다는 것이 지금 2만 명 되는 직원 중의 일부는 그 자회사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임금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고용조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근로조건에 변화가 생기는데 근로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과업을 하는 것이 그게 불법입니까?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야말로 정당하고 타당한 노동조합의 요구잖아요. 그것을 노동부는 불법이라고……

세상에, 고용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부가 나서서 고용 불안을 부추기는 것에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아예 그냥 딱지를 끊어 주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한정애 위원**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법적 판단이 나기 전에 불법과업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파업의 적법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오히려 중노위에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노위가 철도노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1분 더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다른 사람 다 주서 놓고?

○**위원장 신계륜** 저한테 요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중노위가 수서발 KTX 민영화 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중노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 해당 건은 중노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정 대상에 넣어서 조정을 했고요, 조정 중지 결정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임금 등 의견차로 조정안을 미제시할 때 통상적으로 쓰는 문구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시다.

○**한정애 위원** 장관님, 법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지요, 관계 부처가?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법안으로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장관이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보완 장치가 되지 아니하고 일반 상법에서 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것은 없었던 휴지조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원하는 것만 사회적 대화하지 마세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사회적 대화를 해야 그게 소통하는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습시다.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오천 명이나 되는 경찰 집어넣어서 그것은, 그리고 지도부들 다 검거해서 구속시키고 나면 도대체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노사 당사자가 그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국회 내에 국토위와 환노위, 기재위 3개 위원회가 공동으로 해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기구의 틀을 만들 수 있게끔 국무회의에서 적극

적으로 의견 개진을, 의사 개진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국회에서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노사가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아까 장하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손배소 문제들도 이게 계속되면 또 누적될 텐데 어쨌건 타결을 위해서 국회에서 역할을 해 주신다면……

○**한정애 위원** 국회에서 역할을 하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나면 국회가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국무회의에서 의견 개진을 하십시오,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질의를 오전에 한 번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괜찮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양당 간사가 좀 더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어려운 것을 국회 차원에서, 환노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계속하면서 위원회를 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꼭 발언하고 싶은 분은 짧게, 아주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님 발언하실래요? 김경협 위원님도 발언하실래요?

○**김경협 위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고맙습니다.

○**은수미 위원** 질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

○**은수미 위원**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 야당 위원들이 불법적인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고 대화 중재를 해 보기 위해서 어쨌든 최대한의 노력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동안 고용부장관께서는 서울청에서 잠깐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때 이런 대화 중재에 대해서 지시하신 바 있습니까? 야당 위원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어제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서……

○**은수미 위원** 지시하신 바는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상황 보고를 받고……

**○은수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계속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코레일 기관사 신규 채용으로 대체를 하겠다, 심지어는 지금 500명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코레일 최연혜 사장에 따르면 3500명까지 신규채용을 하겠노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민주노총은 28일 총파업을 결의하겠노라, 이렇게 굉장히 사태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부의 구체적 계획이 됩니까? 아까 한정에 위원님이 ‘국무회의에서라도 한마디라도 발언해 봐라’ 그러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 외에, 노력 말고요. 계획이 됩니까, 지금? 노사 갈등이 굉장히 커질 것이 뻔한데 계획이 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방금 말씀하신 코레일, 철도공사 신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뭐냐고요? 기관사 신규채용 대체하고 28일 날 파업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중재하셔야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 계획을 저희 의원실에 내일까지 보고하십시오. 아니, 오늘 저녁 때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추상적인 답변 저희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가 추상적인 것으로 지금 안주해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은수미 위원** 예,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어제 현장에도 안 계셨는데.

세 번째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것은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은수미 위원** 그러니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니, 가정이 아닙니다. 국토부 철도산업발전전략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미 계획이 나왔습니다. 기계화에 기초해서 조사만 해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 조사해 보셨습니까? 임금 및 근로조건에 영향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조사해 보셨어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사안 자체가 파업

의 선언된 목적 자체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것이 진행이 됐을 때 어떠한 근로조건에서 변화가 있을지, 변경이 초래될지 그런 것들은 그때 가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은수미 위원** ‘그때 가 봐야 안다’고도 지난번에 답변하셨어요. ‘그때 가 봐야 안다’면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변화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도 세 번째입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것은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연내에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여러 위원님들이 더 질의할 게 참 많습시다만 아까 김경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환노위가 해야 할 몫이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할지 소위를 구성할지 아니면 어떤 지금 난국을 타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협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을 조금 자제해 주시면서 두 분 간사가 새로운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집니다.

**○장하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하고 답변만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길게 질의를 안 쓰고.....

**○김성태 위원** 저 없으면, 저 없이 계속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아닙니다. 앉아 계십시오.

**○장하나 위원** 아니면 제가 지금 빨리 서면질의를 해서 넣어야 될 상황.....

**○위원장 신계륜** 서면질의를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서면질의를 넣어 주십시오.

하실 말씀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국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와중에서 환노위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라도 나서서 문제를 풀어 보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님께서서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협의를 시작해서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일단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회의 중에 말씀을 하시려다 참으신 장하나 위원님의 서면질의 그리고 은수미 위원님의 서면질의 전부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서면질의한 내용을 말씀하신 기간 내에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노동부장관계서는 지금 질문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만, 저도 질의할게 많습디다만 생략하겠는데 지금까지 노동부가 이 파업 전후한 시기에 철도노조와 관련해서 어떻게 누구와 어떻게 면담했고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를 한명숙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제가 보기에 노동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교섭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파업의 문제와, 파업을 했을 때 주장했던 노동조합의 주장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업이 불법파업이었으면 처벌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고 민사처벌도 받을 수 있지만 주장한 내용이 정당한가 아닌가는 다른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자기 소집된 회의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 경 협	김 성 태	신 계 른	심 상 정
은 수 미	이 완 영	장 하 나	주 영 순
최 봉 홍	한 명 숙	한 정 애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한 공 식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 차	관 관	방 정	하 현	남 옥
-----	-----	-----	-----	-----

기 획 조 정 실 장	심 경 우
노 동 정 책 실 장	권 영 순
근로개선정책관	임 무 송
노사협력정책관	박 화 진
공공노사정책관	송 문 현